

의안번호	2209889
의 퇴 인	주철현 의원
회 답 일	2025. 5. 19.
추 계 번호	25B235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p> <p>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함</p> <p>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신설></p> <p>마. 「선박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신설></p> <p>※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추가</p>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추가(안 제2조)
 - 개정안은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예선¹⁾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선박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형선박²⁾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 현행법 제11조³⁾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를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해운항만업의 정의가 확대되면 공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 제12조제2항⁴⁾은 공사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보

-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 2)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⁵⁾는 국가가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제16조⁶⁾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손실 보전이나 상환 보증 사례는 없었고,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231억원),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75억원) 등 2025년 기준 313억 5,600만원의 비용 보조를 하고 있음

[표 2]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등 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5년 투입예산
1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706
2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	23,050
3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	7,500
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100
합 계		31,356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확대된 업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의 보전, 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 수요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규모·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5조(상환 보증) 국가가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주주 현황

(2024.12월말 기준, 단위: 주수, 원, %)

주주현황			수량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율 (배당기준)
정부	배당주식	기재부(일반회계)	249,297,013	1,246,485,065,000	39.77	39.77
	배당주식	해수부(일반회계)	69,164,626	345,823,130,000	11.04	11.04
	소 계		318,461,639	1,592,308,195,000	50.81	50.81
정부 외	배당주식	한국산업은행	130,392,669	651,963,345,000	20.80	20.80
	배당주식	한국수출입은행	109,557,908	547,789,540,000	17.48	17.48
	배당주식	한국자산관리공사	20,834,757	104,173,785,000	3.32	3.32
	배당주식	기타(해운사 등)	47,528,086	237,640,430,000	7.59	7.59
	소 계		308,313,420	1,541,567,100,000	49.19	49.19
합 계			626,775,059	3,133,875,295,000	100.00	100.00

자료: 해양수산부